

‘흑산공항’ 건설 결정 또 보류

사업타당성 자료 불충분
추가 기술적 검토 필요
찬반 양쪽 모두 실망
이르면 9월 확정될 듯

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안 차관은 “분석에 사용한 입력 자료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흑산도 주민의 이동권과 관련해서는 응급환자 발생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동수단으로 비행기가 최선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회의에는 환경부·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당연직 위원 8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13명, 당연직 민간위원 1명,

특별위원(전남도 행정부지사) 1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앞서 국립공원위원회는 2016년 11월 흑산도 공항 건설 여부에 관한 심의에서 철새 등 조류 보호 대책 등을 요구하며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2017년 7월 보완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국립공원은 ‘항공기 조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방지대책 등을 강구하라’며 재보완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지난 2월12일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 등을 거친 재보완서를 세번째 제출했다. 하지만 국립공원은 이 것마저 사실상 보류했다. 다음 국립공원은 9월 중 개최할 계획이다. 흑산공항 건설 결정 여부가 보류되자 지역 주민과 전남도·신안군 등 지역사회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낙후된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기대했다. /박정국 기자 jwpark@kwangju.co.kr



케냐 식량원조 창고 둘러보는 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 공항 인근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창고에서 열린 식량원조 전달식에서 WFP 관계자들과 지난봄 목표항에서 실어 보낸 한국 쌀이 가득 쌓여 있는 창고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숙원사업인 흑산공항 건설 결정여부가 또 다시 보류됐다. 세번째 보류다.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 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9월 회의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에서 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흑산 공항 건설 공익계획 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 확인 및 논의가 필요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안병욱 환경부 차관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사업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쟁점 사항별로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문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사업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와 지역 주민의 의견 개진 등이 있었다. 사업자 측은 ‘공항을 건설하면 2021년에 60만 명 이상이 비행기를 타고 흑산도를 방문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 측에서는 ‘15분마다 이착륙을 해야 가능한 규모여서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광주시, 수정 재공고

제안서 작성지침 일부 추가
송전탑 이설 등 지침 제시

광주시가 지난 5월 11일 공고한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제안 접수 공고’를 수정해 다시 공고했다. 시는 22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요청서 가운데 제안서 작성지침의 일부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수정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지침 제5조(제안서 포함되는 내용) 중 비공익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가하고, 비공익시설 계획 수립 시 비행안전구역 관련 사항, 송전탑 이설 등, 학교용지 확보 관련 사항, 그 밖에 비공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사전 관계기관 협의 및 내용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참여 의향서 제출업체의 질의 등과 비공익시설 부지에 대한 사전 명확한 관련부서 협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계획 수립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 공원은 중앙·일곡·중외·송정·운암산·신용 등 모두 6곳이며, 이 가운데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나눠 시행한다. 2단계의 경우 개발 면적을 기존 3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지역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1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했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중복 참여를 인정해 공공개발 대상을 늘리고, 각 공원별로 개발 면적에 융통성을 주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2단계 대상 공원의 전체 면적은 711만8839㎡, 비공익시설 즉 개발 면적은 65만9901㎡, 공원 대상지 면적은 39만8412㎡다. 나머지 606만526㎡는 원형지로 보존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개발 면적 비율은 국토교통부 지침(30%)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9.27%다. 시는 지나친 고층화를 억제하기 위해 공원의 용도지역 변경은 중고층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한했다. 또 참가자격 역시 1단계에서 드러난 민간기업의 중복 참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업체별(계열사 포함) 1개 공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산구 민선 7기 첫 인사 ‘원만’

김삼호구청장, 조직안정 무계
소외 직렬·여성 비율 감소

광주 광산구가 지난 19일자로 민선 7기 첫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승진요인이 발생, 공직 내부의 관심이 쏠린 이번 인사는 전체적으로 ‘조직 안정을 겨냥한 균형잡힌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 승진 의결된 공무원 총 46명으로, 이 가운데 4급 서기관 1명과 5급 사무관 11명이 포함됐다. 조직 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던 4급 승진자의 경우 당초 예상처럼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이계두 주민자치과장이 낙점됐다. 또 5급 사무관의 경우, 발탁인사로 40대 초반인 최민성 기획팀장이 낙점돼 일부 논란이 빚어졌다.

하지만, 근무평정은 후순위지만 원만한 성격으로 알려진 A팀장이 사무관 의결에 포함되면서 대체적으로 무난한 인사로 평가 받았다. 특히, 그동안 소외받았던 건축직렬에 사무관 승진을 배정해 B팀장을 승진 의결한 것과 행정직 사무관 승진에 3명의 여성을 포함시킨 것은 균형잡힌 선택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 밖에 6급과 7급 등 하위직 인사에서 근무평정 순위가 뒤바뀐 경우가 일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조직 안정을 꾀하는 차원에서 원만하게 이뤄진 인사라는 게 공직내부의 평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수광산 부구청장은 “민선7기 첫 인사인 만큼 조직안정을 위해 공정하게 심사를 했다”며 “근평과 성별, 경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영동 질의·보류 안전 원안처리...시·도의원 자질 논란

광주시의회, 감투 싸움 이어 개인사업·민원성 관련 질의
전남도의회, 조직개편안 별다른 논의없이 다음날 재상정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과도한 감투 싸움으로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자신의 개인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내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심의를 보류했던 안전을 별다른 논의 없이 다음날 재상정해 원안대로 처리한 것을 놓고 ‘집행부 길들이기 구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김익주 의원은 지난 19일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시장 관사 문제에 대한 추가 질문을 통해 “이용섭 시장이 3억2000만원에 관사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부동산 수수료는 몇 퍼센트로 계산해서 얼마였느냐”며

물은 뒤 “제가 공인중개사입니다만 열린 계산이 안 돼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이 “중개수수료는 0.4%에 부가세 포함, 148만원이 지출됐다”고 답하자 김익주 의원은 메모지에 자필로 기록한 뒤 “이것을 농친 게 한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3억2000만원이면 부담스런 금액도 아닌데 이렇게 까지 철화·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예산 낭비 논란을 빚은 끝에 관사 사용을 철회한 사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타를 하는 대신, 이 시장을 두둔한 셈이다. 앞서 18일에는 임미란 부의장이 ‘민원성

질의’로 도마 위에 올랐다. 시 소유 공유재산 건물 1층에 위탁 카페와 개인회사 사무실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진 임 의원은 감사위원회 업무보고 도중 “임대료가 너무 비싸 공실이 늘고 있다. 우리 사무실도 예외가 아니다”고 질의했다. 또 “숨겨진 공유재산을 찾거나 낮게 부과된 임대료 등을 정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다”는 운영열 감사위원장의 발언에 임 의원은 “당황스럽다”면서 “좀 더 부드러운 행정”을 주문했다. 광주시 소유 다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현황이나 폭리 여부, 특혜성 임대 여부, 무리한 감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자신과 관련된 임대료 문제를 질타한 셈이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처리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기획행

정위는 지난 19일 전남도 조직개편안을 보류했다. 동부본부로 이전되는 산림휴양과 신설 등을 놓고 산림과 환경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다음날 재상된 조직개편안은 별다른 논의 없이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전남 열린 도의회 기획행정위와 도 자치행정국의 만찬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상임위 운영에 대한 아쉬움도 나오고 있다. 초선 의원이 대다수인 11대의 회 특성을 감안해 도정의 이해를 높이려면 해당 실국 업무보고를 꼼꼼히 받아야 하는데, 일부 상임위는 이틀간 몰아쳐 업무보고를 하더니 결할기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정국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의 새 이름

신세계안과

SHINSEGAE

스마일 / 라식 / 라섹
노안 / 백내장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